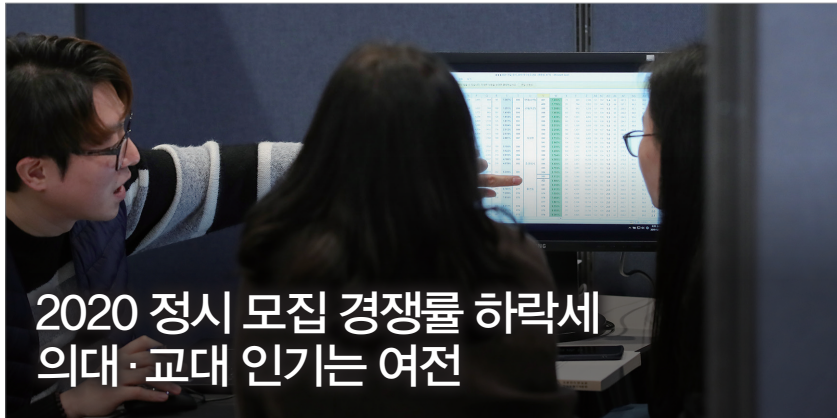


WEEKLY

X

FOCUS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주관으로 19일 송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0 대입 정시 전형 대비 수험생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 연합



이른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생이 약 5만 명 줄어든 데다 수능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의대와 교대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2020학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14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정원 내 기준)이 5.62: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6.12:1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빅3'의 평균 정시 경쟁률도 4.20:1로 전년(4.41:1)에 비해 하락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

지난해 12월 28일 먼저 원서 접수를 끝낸 서울대는 859명을 선발하는 정시 일반 전형에서 2천922명이 지원해 3.4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58:1)보다 낮을 뿐 아니라 2005년 현행 선택형 수능 체제를 도입

한 이래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고려대(서울)는 정시로 886명을 선발하는데 3천872명이 지원해 전년(4.39:1)보다 약간 하락한 4.3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세대(서울)는 1천378명 모집에 6천332명이 지원해 4.6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세대 역시 전년(5.01:1)보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입시 업계는 주요 대학 경쟁률 하락 원인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수험생 인원 자체가 줄었고, 올해 수능이 대체로 까다로웠던 탓에 최상위권 숫자는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강대는 529명 모집에 2천510명이 지원해 전년(5.98:1)보다 소폭 하락한 4.74: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141명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성균관대는 1천191명 모집에 5천405명이 지원해 4.54: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5.16:1)에 비해 하락했다. 경쟁률 하락은 모집 인원이 412명 증가한 결과로 지원 인원은 전년 대비 1천382명 증가했다. 한양대는 892명 모집에 4천449명이 지원해 4.99:1을 기록했다.

경희대는 총 1천511명 모집에 7천425명이 지

원해 전년(6.12:1)에 비해 하락한 4.9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대는 1천288명 모집에 1만2천33명이 지원, 9.8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전년(10.24:1)보다 하락한 수치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732명 모집에 3천694명이 지원해 전년(4.83:1)보다 높은 5.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 하락 예상했던 교대 반전

올해 수능 응시자는 48만4천737명(재학생 34만7천765명, 졸업생 13만6천972명)이었다. 작년 수능 응시자(53만220명, 재학생 39만9천910명, 졸업생 12만840명)와 비교했을 때 응시자는 4만5천483명, 고3 재학생은 5만2천45명 줄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의대와 교대는 경쟁률이 오히려 올랐다. 의예과 경쟁률을 보면 37개 대학 1천255명 모집에 총 7천81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23:1이었다. 이는 전년의 6.18: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서울대 의예과가 2.77:1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연세대(서울)가 4.57:1, 고려대(서울)가 3.42:1을 나타냈다.

교육대학 역시 일반 전형 기준 1천937명 모집에 3천793명이 지원해 1.9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전년 경쟁률 1.9:1보다 조금 올라갔다. 당초 입시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정시 선발 인원 증가 등으로 경쟁률 하락을 예상했다.

청주교대(2.57:1)와 춘천교대(2.18:1), 서울교대(2.15:1)가 2:1을 넘었고 나머지 7개 교대는 2:1 이하로 나타났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올해 고2·3 무상교육 받는다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2·3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동참하는 형태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담은 초·중·고교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 통과돼 확대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원 범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가 절감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고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나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수업 관련 규정도 여럿 달라진다. 우선 새학기부터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된다. 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즉 수업 밖에서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아울러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되고,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

해 상담·교육·직업 체험·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으로의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시스템을 개설한다. 또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 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원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인기 하락’ 직업계고 대수술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나선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급변과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미래 직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직업

계고 체질 개선과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19개교 52학급에 학과 개편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 개편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산업체 전문연수원 등에서 신기술 중장기 연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나서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기존 직업교육의 인기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소재 70개 특성화고에서 2020학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42개교(60.0%)가 미달됐다. 모집 정원을 못 채운 서울 특성화고는 2015학년 2개교(전체의 2.8%), 2016년 10개교(14.3%), 2017년 16개교(22.9%), 2018년 44개교(62.8%), 2019년 38개교(54.3%)를 기록했다. 산업군(교과군)별로는 디자인·문화 콘텐츠, 음식·조리, 정보·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에 성공했다. 반면 건설, 미용·관광·레저, 전기·전자, 보건·복지 관련 학과 등은 충원율이 낮았다.

미달 사태는 비단 서울 소재 학교만이 아니라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시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학과 500여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특성화고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일선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시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500여 개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WEEKLY

X

FOCUS

특목고·직업계고 교과용 도서 자유발행제 도입

앞으로 특목고·직업계고 등에서 전문·심화 과목이나 학교장 개설 과목에 쓰는 교과용 도서는 '자유발행제'로 정한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가운데 인정 도서의 심사 절차를 자유발행제로 완화했다. 자유발행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육청이나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 도서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Ⅰ(특목고 전공 과목), 전문 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학교 전공 과목), 학교장 개설 과목에서 사용하는 도서들이다. 개정안에는 인정 도서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활성화될 학교장 개설 과목의 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학교 교육비 스마트폰 앱 결제 가능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도교육청과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새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교육비 고지 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 앱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스쿨뱅킹 자동이체를 등록·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지 명세는 종이 고지서를 모아서 확인해야 했다.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새 학기 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학생과 교사가 이번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중 일부는 이번 총선 때 교·교생인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내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기준이 없어 일각에서는 학생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선거운동 제한이 강한 나라로 꼽힌다.

"혁신교육지구 활동 학생이 더 행복"

지역 사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초·중·고등학생 6천2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1천175명)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83.66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5천72명)의 평균 78.46점보다 5.2점 높았다고 밝혔다. 행복지수는 삶·가족·학교·지역 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종합해 점수화한 것이다. 혁신

교육지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돕는 자치구로 현재 서울 25개 구가 모두 지정돼 있다.

폐지 위기 맞았던 경기 '꿈의 학교' 올해 10%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폐지 위기를 맞았던 '꿈의 학교'를 2천100개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천908개보다 192개(10.1%) 늘렸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1천200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700개, 다 함께 꿈의 학교 200개 등이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마을 교육공동체가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이 참여한다. 다 함께 꿈의 학교는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운영한다. 꿈의 학교는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학교(정규 교과 과정) 밖 학교'를 말한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방안 운영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 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사업비 148억4천만 원이 원상 복구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